

■ <요약> Y2K 문제 대응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 (오해 1) Y2K는 2000년 1월 1일에만 발생하는 문제다. 문제의 25%는 1999년, 55%는 2000년, 15%는 2000년 이후에 가시화 될 것임
- (오해 2) Y2K는 전산 부문과 관련된 문제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화 설비, 시추 설비, 자동차 등 비전산 부문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해 3) Y2K는 사전에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완벽한 점검이 어렵고, 점검과 보수를 끝냈더라도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
- (오해 4) Y2K는 개별 기업 단위의 문제다. 전산망이 외부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협력 업체나 거래선이 Y2K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오해 5) Y2K 문제 해결에는 기술 관련 비용이 대부분이다. 기술 관련 지출보다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 소송비용과 손실 배상이 훨씬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오해 6) Y2K 문제 해결의 초점은 대재앙을 막는 것이다. 대재앙뿐만 아니라 고객 불편과 업무 처리 지연, Y2K에 미온적이라는 기업 이미지 등 사소한 문제가 급속한 고객 이탈을 초래할 수 있음
- (오해 7) Y2K는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이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도 금융, 세금, 투자 등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Y2K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 Y2K¹⁾ 문제의 성격

- (문제의 성격) Y2K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여력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범국가적인 대응이 지체되고 있음
 - Y2K 문제가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거의 무시해도 좋다는 입장에서부터 세계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커다란 시각 차이가 존재함
 - 또한 IMF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당면한 과제 때문에,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고 실제 투자 여력도 많지 않음

□ Y2K 문제 대응과 관련된 오해

- (오해 1) Y2K는 2000년 1월 1일만 무사히 넘기면 해결된다
 - (근거) Y2K는 2000년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관련 문제들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함
 - (실상) Y2K 문제는 단순히 2000년도의 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99년 8월 21일 문제²⁾, '99년 9월 9일 문제³⁾, 윤년과 관련된 '2000년 2월 29일 문제⁴⁾, 그리고 컴퓨터 誤작동과 문제 발생간의 시차(時差)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영국의 Y2K 대응 민간단체인 'Taskforce 2000'는 Y2K 문제의 5%는 1999년 이전, 25%는 1999년, 55%는 2000년, 15%는 2000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⁵⁾
- (오해 2) Y2K는 기업 혹은 산업의 전산 부문과 관련된 문제이다
 - (근거) 컴퓨터가 주 구성요소인 전산 부문에서만 Y2K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

1) Y2K문제란 컴퓨터 기술상 2000년을 가리키는 연도표기 '00'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넓게는 컴퓨터의 날짜 인식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포괄함
2) 항공, 선박 등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컴퓨터가 99년 8월 21일까지만 인식하고, 그 다음 99년 8월 22일을 위치정보 최초 제공일인 80년 1월 6일로 인식하게 됨
3) '9999'를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종료 기호로 인식하여 컴퓨터 작동이 중단될 수 있음
4) 윤년의 법칙에 따라 4년 주기와 100년 주기가 겹치는 2000년에는 2월 29일이 존재하지만, 컴퓨터는 2월 29일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wysiwyg://133/http://nt.excite.com/news/r/990420/09/tech-britain-yk

- (실상) 자동화 설비, 가전, 자동차, 항공기, 엘리베이터, 의료 기기, 시추 설비, 무기체계 등의 非전산 부문에서도 개별 기기마다 초소형 전산처리 장치인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Y2K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
 - 그러나 非전산 부문의 경우, 개별 기기를 하나 하나 점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오해 3) Y2K 문제는 사전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근거) 문제의 원인과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이를 교정하면 문제 발생 이전에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함
 - (실상) 현실적으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점검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사전 테스트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실제 2000년이 도래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음
 - Y2K 대응에서 가장 앞선 미국도 연방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모두 교정하는데는 5~10년이 걸린다고 보고, 핵심 시스템 6천 개만 선별하여 대응하고 있음
- (오해 4) Y2K 문제는 개별 기업 단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 (근거) Y2K 문제를 개별 기업 단위의 문제로 인식하여 업종별, 국가적 차원의 대응보다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함
 - (실상) 한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개 기업 단위의 Y2K 문제 해결로는 불충분함
 - 또한 기업 단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업체나 협력 업체가 Y2K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부품 조달과 생산 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GM, 맥도날드, 나이키, 디어(Deere) 등 다국적기업들은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래선과 협력 업체와는 거래를 단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오해 5) Y2K 문제 해결 비용에는 기술 관련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근거) Y2K는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스템의 교체나 소프트웨어의 교환 등 기술과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함
 - (실상) 기술적 접근을 통해 Y2K 문제를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봉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 소비자, 거래선, 소비자, 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이 때 법적 소송비용이 기술 관련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큼
 - 세계적인 Y2K전문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그룹은 기술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 시

시스템 변환 비용은 전세계적으로 3천억~6천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외국 기업들은 국내 거래 업체에 대해 Y2K 문제에 따른 손실 배상을 명문 화할 것을 요구하고, 미온적인 기업에게는 거래 단절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오해 6) Y2K 문제 해결의 초점은 대재앙을 막는 것이다

- (근거)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불능에 따른 사회경제적 공황의 도래 등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소한 문제들은 경시하는 경향이 강함
- (실상) Y2K로 인해 세계공황 등의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있으나, 대부분은 업무 처리 지연, 고객 불편, 납품 지체 등이 문제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객들은 곧바로 경쟁 업체로 이탈할 것이며, 결국 기업의 가치 혹은 생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 90년대 초 Leading Edge라는 컴퓨터 회사는 자사 제품이 '미켈란젤로'(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에 감염되었다는 신문기사 하나로 고객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됨

- (오해 7) Y2K는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이다

- (근거) 주로 기업과 정부가 거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PC외에 Y2K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실상) 일반 소비자들도 컴퓨터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과 거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경우, 만약의 사태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금융, 세금 등의 내역은 인쇄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고, Y2K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再考해야 하며, 停電·에너지가격 상승·의료 시설의 이용 불가능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함

□ 시사점

- Y2K 문제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산업,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별 대응 지침 마련과 조속한 실현이 최선의 방안임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724-4046